



유럽의회 환경위, 전문 의료기기에도 수은사용을 금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체온계 등 일반소비자용 수은함유 측정기기에 대한 시장판매 금지조치를 혈압

측정기 등 전문 의료기기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3일, 오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일반소비자용 측정기기의 수은사용을 금지하는 법안(COM(2006) 69 final)에 대한 위원회 투표에서 이를 채택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판매금지 대상 수은함유 측정기기의 적용범위를 일반소비자용뿐만 아니라 의료용 전문기기로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 수정안은 법안 적용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은함유 소형기압계(small barometer)의 판매를 허용하여 적용예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는 당초 집행위가 모든 일반소비자용 기압계에 대해 수은사용을 금지한 것과 달리 일부 그 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집행위가 지난 2월 21일 EU 수은저감 전략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한 지침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및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76/769/EEC) 부속서 I을 개정하는 지침으로, 체온계와 혈압계, 기압계 등 일반 소비자용 측정기기에 수은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지침안 발표 당시 집행위는 의료용

혈압계와 기타 전문측정 기기는 적절한 대체제가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나, 환경단체 등은 그 적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며 향후 법 제정과정에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위원회의 적용범위 확대 수정안 제시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당초 집행위(안)과 달리 소형기압계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그 크기에 상관없이 수은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향후 각료이사회와 의회 전체표결에서 이번 소형기압계 적용예외 결정을 부결시키고 원래의 안대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오는 10월 25일, 수은함유 측정기기에 대한 시장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이 법안에 대한 전체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각료이사회에서의 정치적 합의가 연말인 12월 4일쯤 이루어질 전망이다.



출처 | EU 집행위, 유럽의회, Euractiv, EEB

CONTENTS

헤드라인

1

유럽의회 환경위, 전문 의료기기에도 수은사용을 금지

해외동향

2

- 미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대응법규 제정
- 월마트, 환경라벨 인증 수산물 판매 개시
- Nokia와 Dell, 그린피스의 전자기업 친 환경성 평가에서 1위
- 렌터카 회사 Hertz, 친환경 마케팅 시작

새 간행물

8

EU, WEEE 및 RoHS 지침 FAQ 업데이트

전문가 리포트

9

- IEC/TC 111 개요, 최신 논의동향 및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 국제 녹색구매 컨퍼런스(EcoProcura 2006)를 다녀와서

관련 국제회의 정보

16



미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대응법규 제정



미 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9월 27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응법규를 제정했다. 슈왈츠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8월 31일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최종 사인함으로써 해당법안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 법(AB 32,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은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배출허용량 규정과, 배출업자의 배출보고 의무화 및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국(Air Resource Board)에 대해 2008년 1월까지 배출허용량 설정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배출규제를 실시하고, 발전소, 운송업 등 온실가스 배출업자의 온실가스 배출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들의 규제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를 허가하고 있어, 조만간 캘리포니아 지역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AB 32 제정으로 미국 내에서 최초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의미 있는 온실가스 규제법이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지난 2005년에 자동차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미국 내에서는 선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Environmental Defense 등과 같은 환경단체들은 특히, 해당법 제정이 미국 내 다른 주정부의 유사 법률 제정을 유도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동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최소 8개의 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유사한 배출규제법 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채 여전히 국제사회 공동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부시 행정부를 얼마나 압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캘리포니아 주의회, Environmental Defense 등

➔ 월마트, 환경라벨 인증 수산물 판매 개시

대형 유통체인인 월마트는 지난 8월 31일, 해양보호위원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환경라벨인 'MSC 마크'를 받은 생선제품 10종을 미국 내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MSC는 과잉어획과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족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환경라벨링은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에 대한 인증차원을 넘어 자원관리 문제까지 고려해 생태계 전반에 걸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해주는 삼림보호위원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인증과 MSC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월마트 측은 "MSC 마크는 MSC가 설정한 엄격한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어획활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향후 3~5년 내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북미산 모든 수산물은 MSC 마크를 인증받도록 할 방침이며, 이번 10종의 인증 제품을 매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월마트가 자체 매장에서 처음으로 MSC 인증 수산물 판매를 개시한 것에 대해 MSC 측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조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1개 어종이 MSC 인증을 획득했으며, 26개국의 주요 유통소매점에서 약 370개 이상의 상품라인 수산물이 해당 라벨을 부착해 판매되고 있다. 3천 5백만톤에 해당하는 수산물이 MSC 인증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연어의 42%, 송어의 32%, 그리고 바닷가재의 18%가 MSC 인증 수산물에 해당한다.

출처 | 월마트, MSC



➔ Nokia와 Dell, 그린피스의 전자기업 친환경성 평가에서 1위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8월 25일, 전자기업 친환경성 평가에서 세계적 이동전화 제조회사인 노키아(Nokia)와 PC 제조회사 델(Dell)이 1위에 랭크 됐다고 발표했다. 이 순위는 그린피스가 해당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PC 및 이동전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친환경정책 및 그 실행현황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Guide to Greener Electronics' 를 통해 그린피스는 유해물질 저감과 폐제품 회수·재활용 2개 분야에 대해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대상 기업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해 순위를 선정했다. 유해물질 분야에서는 ▲ 예방원칙에 근거한 화학물질 정책 추진, ▲ 화학물질의 공급망 관리, ▲ PVC 사용중지 노력, ▲ EU RoHS 지침 규제대상 브롬계 난연제를 포함한 모든 브롬계 난연제 사용중지 노력, ▲ PVC 및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출시 의무, 5가지 세부기준에 대한 기업의 실행수준을 평가했다. 그리고, 폐제품 회수·재활용 분야는 ▲ 폐제품 회수·재활용 비용부담, ▲ 자발적 무료 회수시스템 운영, ▲ 제품 판매 모든 지역에서 명확한 폐제품 회수재활용 정보제공, ▲ 폐제품 회수·재활용 실적 보고 여부, 4가지 세부기준에 대한 기업의 실행수준을 평가한다.

해당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그린피스는 대부분의 기업이 기대수준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몇몇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최상위 기업과 하위 그룹 간 격차가 컸다. 공동 1위를 차지한 노키아와 델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7점을 획득한 반면, 14개 대상 기업중 9개 기업이 5점 미만이었다. 노키아의 경우 작년 말부터 모든 신제품에 대해 PVC 사용을 중지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모든 세부품에 브롬계 난연제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해물질 관리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델은 해당 분야에서 매우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린피스는 전자기업 대상 친환경성 평가를 매 분기마다 실시해 그 순위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유해물질 비함유 제품 수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이다. 친환경성이 기업의 시장 경쟁력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요즘,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와 직결되는 이러한 순위공개에 관련 기업은 그 파급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린피스의 순위선정이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보고 등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의사소통 노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출처 | 그린피스, EDIE

➔ 렌터카 회사 Hertz, 친환경 마케팅 시작

렌터카 회사 Hertz는 최근 자동차의 대기오염 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 발맞춰 지난 9월 7일,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연비가 우수한 친환경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친환경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렌터카 시장에서도 친환경 마케팅을 시작한 것이다.

Hertz가 구축한 친환경차량 대여 서비스 'Green Collection'에는 도요타 Camry, 포드 Fusion, 뷰익 LaCross 및 현대 Sonata가 포함된다. 이 차량들은 고속도로에서의 연

비가 1마일 당 28갤런(28MPG, 약 12km/L) 이상이며, 이 중 대부분이 미국 EPA의 SmartWay 인증을 받은 차량이다. SmartWay 인증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자동차에 대해 부여된다. EPA에 따르면, SmartWay 인증 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그 환경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검증 받은 차량이라고 밝혔다.

Hertz의 친환경차량 대여 서비스는 현재 미국의 주요 50개 공항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미국 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 Greenbiz.com, 미국 EPA

➔ EU, WEEE 및 RoHS 지침 FAQ 업데이트



EU 집행위원회가 2006년 8월 현재 업데이트 버전의 WEEE 및 RoHS 지침 FAQ를 작성해 공개했다. 이 FAQ 문서는 해당 2개 지침에 대한 각 회원국 주무기관의 지침 해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해당 규제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게도 참고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업데이트 FAQ 문서는 RoHS 지침 적용 예외사항에 대한 정보 및 권고사항을 보강하고, '시장출시(put on the market)' 정의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해석을 제공함과 동시에, 배터리 생산자 의무, 유해물질 함유 부품에 대한 집행위의 입장, 그리고, RoHS 지침 만족여부 표기(marking) 등에 대한 의견 및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시장출시(put on the market)'에 대한 정의 해석상의 문제는 많은 관련 기업의 규제대응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업데이트 FAQ 문서에서 집행위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시점 평가를 위해 EU 시장에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도록 한 해당 행위에 대한 각 사례별 평가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전보다 조금 부가설명이 추가된 해석이기는 하지만, 그 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하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자사제품이 RoHS 지침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로고를 표시하기도 하고, 시험분석기관 등을 통해 인증 받고 해당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 대응여부 표시를 위한 인증라벨에 대해 FAQ 문서는 구체적인 적합여부 증명에 대한 세부규칙은 각 회원국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국의 집행기관을 직접 컨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관련 기업의 이 같은 자발적 라벨부착은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EU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가능 하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 EU 집행위, Perchards

<전문가리포트>에 이어서

지난 2001년에 세계 최초로 그린구입법을 도입한 일본 환경성 관계자는 2010년까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구매목표뿐 아니라 산업계의 녹색구매 목표 등을 구체화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그린구입법 도입 전에는 79% 수준에 머물던 공공녹색구매 비율이 이미 2003년에 98.5%를 달성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의무구매가 아닌 권고제를 채택했는데, 광역지자체는 100% 녹색구매를 이행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약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의 녹색구매를 2010년에 100% 달성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은 50%, 일반 기업체는 30%까지 녹색구매를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도 이제는 공공기관의 녹색구매를 산업계 등 민간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정부나 지자체 위주로 진행됐던 종전의 컨퍼런스와 달리, 산업계에 대한 녹색구매 참여를 강조했다라는 점 역시 중요한 진전이라 판단된다. HP, 포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녹색구매를 실천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번에는 이것이 하나의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주로 생산자로서 어떻게 친환경상품을 생산

하고 그린마케팅에 활용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 포스코가 발표한 우리나라 산업계의 녹색구매 실천사례는 향후 산업계가 추구해야 할 녹색구매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에서 자주 언급된 지속가능제품, 친환경전기(green electricity), 그린빌딩, 지속가능목재 인증제(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공정무역(fair trade) 등은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정책을 어떻게 확대·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생각해 하는 좋은 기회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국내에도 ICLEI에 가입한 회원이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를 포함해 40여개 지자체에 이르나 녹색구매 컨퍼런스에 참석한 지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제주도와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조례를 제정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다른 환경이슈에 비해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녹색구매분야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과 역할을 기대해 본다.



IEC/TC 111 개요, 최신 논의동향 및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아주대학교 | 이건모 교수



서언

지구가 당면한 자원소모 및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산품의 대량생산/소비라는 것이 작금의 중론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제품관련 환경규제를 법제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EU의 WEEE, RoHS 및 EuP 지침이 있다. WEEE 지침은 전기전자 제품의 재활용을, RoHS 지침은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들 두 법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들로서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은 이들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005년 8월에 통과된 법인 EuP 지침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친환경설계를 수행한 전기전자 제품만이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상기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모든 전기전자 제품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요건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즉 모든 전기전자 업체들은 자사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특히 EU의 에너지 라벨 지침뿐만 아니라 미국 EPA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오래 전부터 자사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그러나 친환경 설계 즉 에코디자인은 생소한 분야로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EuP 지침은 전기전자 기업들에게 크나큰 도전으로 부각되고 있다.

IEC/TC 111의 개요

IEC/TC 111의 정식 활동 명칭은 '전기전자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 표준화(Environmental standardization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systems)로서, 2005년 3월 밀라노에서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의장국은 일본, 간사국은 이태리로 선출되었다. 쉽게 생각하면 의장국의 권한이 간사국보다 크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이유는 회의 의제라든지 코멘트 문서의 취합, 발송 등 표준 개발과 관계된 모든 업무가 간사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장이 회의의 진행을 통해 영향력을 심분 발휘할 수는 있다.

창립총회가 개최되기 전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최고 의결기구인 SMB(Standard Management Board)에서 누가 의장국이 되

고, 누가 간사국이 되는가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단 한 표 차로 이태리가 간사국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그 표결의 결과가 매우 치열한 경쟁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TC 111에 관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었는가, 왜 TC 111이 중요한 TC 인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EuP 지침은 framework directive로서 법의 큰 골격(framework)만 제시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소위 New approach의 산물이다. 이때 세부 이행방안에는 두 가지 기동이 있다. 첫째는 구체적 규제 사항을 제시하는 이행방안(implementing measure) (주: 각 제품군별로 작성)이다. 둘째는 framework에서 언급한 제반 방법론과 절차에 관한 국제적 규범 즉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자에는 제품군별 환경성 개선이 요구되는 지표를 발굴하고 지표별 목표치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에코디자인 방법론, 데이터 수집 절차 및 포맷, 적합성 평가 요건 및 절차 등의 제정이 목적이다.

여기서 왜 느닷없이 EuP 지침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는가에 대하여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다. 도대체 EuP 지침에서 요구하는 표준개발 업무와 TC 111과는 무슨 관계인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가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에게 내건 mandate를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EU 집행위는 CENELEC이 EuP 지침 이행을 위한 두 번째 기동인 표준개발을 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CENELEC은 전기전자 제품의 에코디자인 방법론, 부품 및 제품의 물질 조성에 관한 선언, 제품/부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분석 방법 및 제품/부품의 환경성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표준개발을 하도록 EU 집행위로부터 요청 받았다. 이에 CENELEC은 Dresden 협정에 의거 IEC가 당해 표준을 개발하도록 요청하였고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2005년 3월에 IEC/TC 111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EU 회원국들은 TC 111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IEC에서 발간된 표준은 EU 회원국의 투표를 거친 후 EU 표준 즉 CENELEC 표준이 된다. IEC/TC 111 즉 제품관련 환경 표준을 제정하는 TC의 주도권 싸움에서 EU가 한 몸이 되어 회원국인 이태리를 적극 지지한 것을 이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최근 논의 동향 및 향후 방향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IEC/TC 111은 세 개의 실무 그룹(WG, Working Group)을 갖고 있다. WG1은 물질선언을 표준화하는 곳으로, 2006년 6월 첫 회의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전기전자 제품/부품의 조성을 선언하는 선언 양식과 어느 정도 깊이까지 조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WG2는 TC 111의 핵심 그룹으로써 전기전자 제품의 에코디자인 방법론을 표준화 한다. 여기서는 에코디자인 수행 시 고려사항, 수행절차, 가용한 설계 보조 도구, CE(Conformite Europeenne) 마크의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절차, 환경성 분석 방법, 환경성과지표 발굴 방법 등 에코디자인에 필요한 거의 모든 내용을 표준화 한다. 현재 CD(Committee Draft)단계로서, 2006년 11월 말 상해 회의에서 CDV(CD for voting)로의 승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일 CDV가 되면 1년 이내에 국제 표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즉 2007년 말이면 전기전자 제품 에코디자인 국제 표준이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WG3는 RoHS 지침에서 규정한 여섯 가지 유해물질의 분석 방법론을 표준화 한다. 이 그룹은 IEC의 ACEA(Advisory Committee on Environmental Aspects) 시절에 창립되었으며 TC 111의 창립과 함께 WG3로 변신하였다. 그 결과 TC 111의 WG중 제일 먼저 국제 표준을 발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모든 실무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국제 표준으로 발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공급망을 따라서 공급되는 부품 및 재료의 환경성 정보이다. 프랑스에서는 공급망 상의 부품/재료의 환경성 정보 제공 포맷과 데이터 수록 요건을 표준화 하자고 제의했으나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수용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공급망 상에서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을 표준화 하자고 제의했으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프랑스에서 시작한 WG3 관련 ad hoc 그룹인 분석 시료 준비 방안을 보완하는 새로운 방법 개발에 관한 제안을 2007년 2월 동경 총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TC 111에서는 에코디자인에 관련된 필요한 도구, 방법 및 시스템의 표준에 관한 회원국의 제안서를 항상 받고 있다. 현재까지 거부 당했던 제안서들이 다시 제기될 개연성은 충분하다. 또한 새로운 내용의 제안서들 역시 제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EU의 EuP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EuP 지침 자체 요건 및

이행방안과 IEC/TC 111에서 제정하는 표준을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EuP 법규, 이행방안 및 표준들에서 제시하는 모든 시스템, 방법론, 도구, 절차, 양식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이들을 자기 것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EuP 지침을 위시한 제품관련 환경규제 법규를 준수할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제품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 환경 측면을 접목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uP 지침의 부속서 5 항에 시스템 접목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다. 여기에는 환경 성과 목표 설정, 환경 성과 지표 발굴, 에코 profile 제시, 주요 환경 측면 파라미터 규명, 기존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의 접목, 에코디자인 가이드, CE 마크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선언 관련 자료, 이 모든 것들의 문서화 등이 포함된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제공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설계 프로세스에 접목시키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문서화 역시 기업의 책임이다.

둘째, IEC/TC 111 국제 표준 작성 과정에 참여하여 자사의 방법론, 절차, 도구, 양식 등을 제시하여 이들이 국제 표준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직접 TC 111회의에 모두가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국내에는 TC 111에 대응되는 mirror committee가 산자부 기술표준원 산하에 있다. 여기는 TC 111과 동일한 WG들이 존재하고 TC 111 WG들에서 나오는 문서들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국가의 입장이 담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mirror committee 논의 과정에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사 방법론의 반영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는 방법들을 숙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의 역량은 제고된다. 이것이 표준화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수확이다.

결어

기술적 무역 장벽으로 새로이 대두된 제품 관련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환경규제의 핵심은 친환경 제품 설계이기 때문에 에코디자인을 기존 제품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 접목 시킨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에코디자인 관련 도구를 수용할 뿐 아니라, IEC/TC 111에서 개발하는 에코디자인 관련 표준을 자사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접목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은 제품관련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환경이라는 기술적 무역 장벽을 극복하게 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국제 녹색구매 컨퍼런스(EcoProcura 2006)를 다녀와서

친환경상품진흥원 | 문승식 국장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북미와 아프리카 등 54개국 360여명이

모여 지속가능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EcoProcura 2006'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와 EU 집행위원회에서 실시중인 '지속가능 지방정부 환경경영 및 구매(Local Authoritie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Procurement)' 프로젝트와 국제녹색구매네트워크(IGPN)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의 부제인 'Practical Solution for Sustainable Procurement'와 폐회에서 채택한 성명인 'Moving to Market'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녹색구매 실천활동을 통해 시장의 그린화를 이뤄내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국의 우수사례 발표와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공공부문의 녹색구매가 환경정책 이슈로 부각된 시점은 불과 10년 전부터이다.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의 전환촉진을 21세기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인식한 OECD는 정부의 녹색화(Greening of Government)를 1996년에 회원국들에게 권고했다. 이는 통상 OECD 회원국들이 GDP의 15~25%를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지렛대로 활용한다면 녹색시장을 크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어서 ICLEI가 1997년부터 회원 지자체의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Buy it Green'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공공부문의 녹색구매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ICLEI로서는 이번 회의가 지난 10년간의 녹색구매정책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해보는 자리였던 셈이다.

회의를 주관한 ICLEI 관계자의 감격에 젖은 표현대로, 녹색구매를 처음 주창했던 10년 전에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적었고 실행사례도 많지 않았으나 이제는 수많은 국가들이 녹색구매를 주요 환경정책으로 수용했다는 점은 ICLEI가 이뤄놓은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번 회의는 정부나 공공기관은 300유로, 산업계는 500유로라는 적지 않은 참가비를 내고서도 기꺼이 50개국 이상이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은 녹색구매를 단독법으로 도입했고, 미국을 비롯한 대만, 북유럽 국가들은 친환경상품의 정부구매시 10% 정도의 가격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녹색구매에 대한 인식도 크게 넓어졌다. 녹색구매 운동의 초기에는 친환경상품의 범위가 환경마크제품 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녹색구매의 범위를 그린서비스는 물론,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그린화시킬 것인가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ICLEI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지속가능구매정책(Procura+ Sustainable Procurement Campaign)에서는 녹색구매 대상을 신재생에너지(2008년까지 20% 목표), 유기농산물, 병원, 케터링 서비스, 그린빌딩, 보건안전을 고려한 청소 및 오염물질 저감형 저공해자동차 보급확산 등도 포함시켰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과 일본의 기초발표를 포함해 총 29개 세션에서 100여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석하여 각국의 지속가능구매정책, 구체적인 실천사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에서는 필자를 포함하여 포스코, KT, 유한김벌리 등 산업계와 시민단체(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 등 총 7명이 참석하여 필자와 포스코 녹색구매 담당자가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필자는 국내의 친환경상품법 시행(2005.7)과 관련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공공녹색구매 실적을, 포스코는 기업소비자로서 사회공헌 측면에서의 녹색구매 실적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됐던 몇몇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연사로나온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1998년부터 환경보호청이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녹색구매정책(Environmentally Preferable Purchasing)의 이행평가 방법론을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어서 해당기관들의 구매 실적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공공녹색구매 실적 자동집계 시스템에 대하여 "경이롭다(miracle)"는 찬사와 함께 우리의 계량화된 평가방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영국은 5~6년 전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강조했으나, 지난 4월에 발간한 영국정부의 국가계획은 지속가능제품(sustainable products) 정책으로, 즉 작업장 노동조건 등 윤리와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발표자였던 영국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특성 이외에 제품생산 또는 유통과정중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1년에 정부구매기준에 환경요소를 반영한 노르웨이 역시 금년 말에 녹색구매 정부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윤리구매 기준을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처럼 EU 국가들을 필두로 지속가능제품에 대한 개념정립과 평가요소 개발이 활발하다는 점을 이번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면 하단>에 계속

공 지 사 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친환경상품진흥원」내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회의 정보

- ① 10.4. ~ 10.6. GRI 컨퍼런스(Reporting: A Measure of Sustainability)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② 10.17. 그린마케팅 국제 컨퍼런스 (서울 전경련회관)
- ③ 10.26. ~ 10.27. International Mercury Conference: How to reduce mercury supply and demand (벨기에 브뤼셀)
- ④ 11.14. ~ 11.16.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balance (일본 쓰쿠바)
- ⑤ 11.14. ~ 11.17. World Recycling Forum (중국 상하이)
- ⑥ 11.20. ~ 11.21. 제6차 배출거래제도 및 탄소시장 컨퍼런스 (영국 런던)
- ⑦ 11.28 ~ 11.29 2006 전기전자기기 설계와 재활용 (영국 개트윅)
- ⑧ 11.28.~ 12.1. Pollutec 2006 (프랑스 리옹)

200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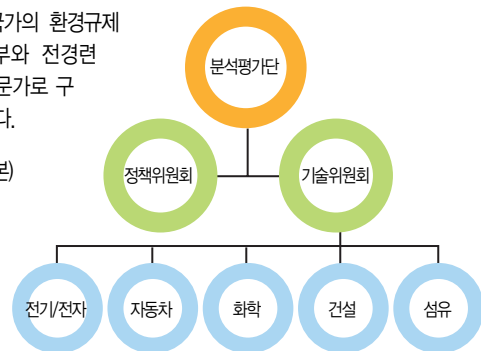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06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EN시스템운영체제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친환경상품진흥원,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친환경상품진흥원,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 02-358-6800(#232) | 팩 스 : 02-358-8560 | 이메일 : jung60@koeco.or.kr

